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은 감소했는가?: 허상에 대한 소고

피에르 살라마

파리 제13대학 명예교수·경제학자

원제와 출처: Pierre Salama, “¿Se redujo la desigualdad en América Latina? Notas sobre una ilusión”,
Nueva Sociedad, No. 257, julio-agosto de 2015, pp. 85-95.

핵심어: 지니계수, 불평등, 진보 정부, 소득,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인, 집단, 사회 계급 사이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2000년대 들어 불평등은 감소했을까?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진 라틴아메리카가 1990년대에 비해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가?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으로, 소득 불평등, 세습 재산의 불평등, 법적 신분에 따른 불평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 성 불평등, 노동 조건의 불평등, 고용 신분의 불평등, 인종에 따른 불평등 등 수많은 불평등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대부분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녀가 중산층 자녀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역시 빈곤층, 여성, 흑인, 원주민의 경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서 감소 추세에 있는지,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변하였는지 여부이다. 진보 정권이 들어선 국가의 경우는 명백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 빈곤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도시 극빈층과 시골 극빈층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다. 시골의 극빈층 비율이 도시의 극빈층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열악한 지역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이므로, 시골 지역을 빈곤 감소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¹⁾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은 어떠한가? 성에 따른 소득 불평등은 유의 미한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았고, 심한 경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낙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부색에 따른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부 실한 공교육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흑인 청소년의 대학진학을 장려하는 정 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주로 중하위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로 귀결되었고, 대부분 소득수준이 평균 이상인 가정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공립 초·중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 러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같 은 안데스 지역 국가는 시민으로서의 원주민 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식적인 담론은 결국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빈곤은 감소할 것이며, 특히 최상위계층(상위 1%, 5%, 10% 구간)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불평등의 감소를 통해 중산층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허상과 실상의 차이는 크다. 브라질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의

1) Pierre Salama, "Luchas contra la pobreza en América Latina: el caso de la pobreza rural en Brasil", *Problemas del Desarrollo*, Vol. 42, No. 165, 4-6/2011.

인상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다. 중산층 국가로 ‘전환한’ 국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공공서비스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낮은 교육수준, 사회계층 하향 이동 그리고 사회적 도태 등의 문제가 줄줄이 밝혀졌다. 이 글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전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소득 불평등의 감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가? 고소득층은 2000년대 들어와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는가?

I. 2000년대에 소득 불평등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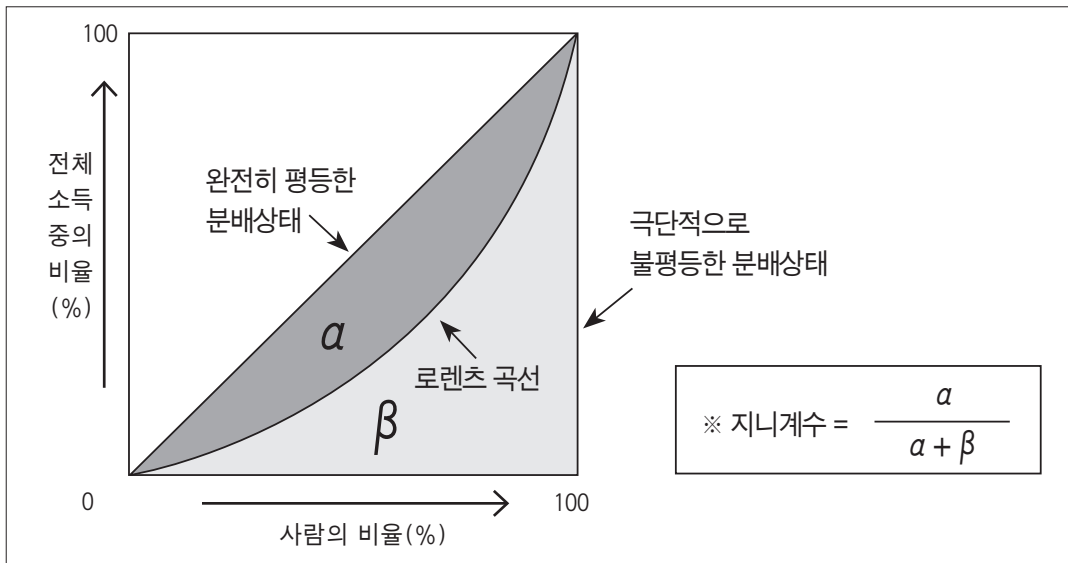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에서, 특히 이른바 ‘진보’ 정부가 집권한 국가의 경우, 급여는 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비공식 부문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실업 역시 감소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했고, 빈곤은 10년 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²⁾ 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선진국과는 반대로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이 약간 줄기는 했다.³⁾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소득 불평등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으며 최상위계층의 소득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성과조차 2014년 위기의 결과로 2015년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공식 자료에 드러난 불평등 감소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소득분배의 척도를 가늠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이는 임금과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2) Pierre Salama, *Les économies émergentes latino-américaines, entre cigales et fourmis*, Armand Colin, Paris, 2012.

3) *Ibid.*

〈그림1〉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출처: <http://youth.bokeducation.or.kr>

기능적인 기준과 개인별 혹은 가족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적 분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는 소득이나 자산 가릴 것 없이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또는 5분위) 배율⁴⁾을 사용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인구 비율과 소득 분배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인구와 소득이 그래프의 두 축을 구성하는데,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로지르는 대각선과 가까울수록 완벽한 평등을 의

4) 10분위 배율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를 일렬로 배열하여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최상위 구간(상위10%)의 소득을 최하위 구간(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10분위 배율은 그 값이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다. 5분위 배율도 산출방식은 10분위 배율과 동일하다. 다만 구간이 5개이고, 비교대상이 최상위 20%와 최하위 20%라는 점이 다르다 - 옮김이.

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가까울수록 대각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은 작아지고 따라서 지니계수도 작아지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불평등지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로렌츠 곡선의 형태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 10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가 그다음 10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로 상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위 10분위 계층과 하위 10분위 계층의 관계, 즉 소득 양극화 지표를 이용한다.⁵⁾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는 더 평등해진다.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지니계수는 0.519에서 0.416으로, 브라질은 0.58에서 0.524로, 멕시코는 0.542에서 0.539(2012년 기준)로, 콜롬비아는 0.56에서 0.549로, 볼리비아는 0.604에서 0.476(2012년 기준)으로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의 소득을 하위 4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소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4년과 2012년 사이 이 비율이 21.8에서 11.9로 떨어졌고, 브라질은 2001년과 2013년 사이에 32.1에서 18.2로, 멕시코는 2002년과 2012년 사이 15.1에서 14.1로, 볼리비아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30.3에서 12.1로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보면, 극빈층 및 빈곤층은 확실히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9.3%에 달하던 극빈층이 2013년 11.7%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빈곤층은 43.9%에서 28.1%로 감소했다. 이 평균치는 나라별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살펴보자면,

5)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4*, CEPAL, Santiago de Chile, 2014.

브라질의 경우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극빈층은 10%에서 5.3%로, 빈곤층은 30%에서 14.1%로 감소한 반면, 멕시코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극빈층이 9.1%에서 10.4%로 약간 증가했고, 빈곤층은 31.8%에서 29.9%로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⁶⁾

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면 빈곤도 감소하는가? 조세제도의 개혁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조세 개혁은 충분하지 않았다. 몇 가지 세금은 증가했지만, 때때로 징수율이 감소하고 세금면제가 대폭 늘었다. 이런 변화를 거치며 조세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해졌고 더 불투명해졌으며, 오히려 퇴보했다.⁷⁾ 게다가 탈세는 더 늘어났다.⁸⁾ 선진국의 지니계수는 나라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15포인트 하락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는 직접세와 현금이전의 분배 효과를 고려하면 평균 2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세금 중 간접세 비율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도 간접세를 누적해서 부과하며, 그 부담은 전체 인구에 돌아간다. 직접세는 약한 누진적 성격을 띠고 있고, 종종 부분적 면세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세는 근본적으로 개인보다 기업에 더 많이 부과된다.⁹⁾ 최근 연구는 이전소득에 대한 순 세금의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낸시 버드설, 노라 루스티그, 크리스천 마이어는 소득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본원 소득은 능동소득과 수동소득¹⁰⁾을 합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6) *Ibid.*, p. 96.

7) José Roberto Afonso, “Imposto de renda e distribuição de renda e riqueza: as estatísticas fiscais e um debate premente no Brasil”, *Revista da Receita Federal. Estudos Tributários e Aduaneiros*, Vol. 1, No. 1, 2014.

8) Roberto Piscitelli, “Reforma tributaria”, *Jornal dos Economistas*, No. 301, 5-6/2014.

9) Pierre Salama, *Les économies émergentes latino-américaines, entre cigales et fourmis*, *op. cit.*

10) 능동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가리키며, 수동소득이란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인

의미한다. 둘째, 가처분 소득은 본원 소득에서 직접세를 빼고 현금 이전소득을 더한 것을 뜻한다. 셋째, 세후 소득은 가처분 소득에서 보조금의 순 간접세를 뺀 것이며, 마지막으로 최종 소득은 건강과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포함한 금액이다.¹¹⁾ 2009년 브라질의 경우, 빈곤층(하루 평균 4달러 미만¹²⁾)은 조건부 현금지급을 받았고, 납부해야 하는 직접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33% 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하루 평균 4달러에서 10달러 사이)의 가처분 소득은 8.4% 증가한 반면, 부유층(하루 평균 50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은 직접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6.2% 감소했다. 중산층(하루 평균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간접세의 귀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중산층의 세후 소득은 본원 소득에서 14% 축소되고, 부유층의 경우 20.7% 축소된다. 그 결과 불평등은 경미하게 감소한다. 최종 소득만 고려하면(즉, 건강과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을 포함하면)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이득이 되는 강력한 누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빈곤층의 최종 소득은 본원소득보다 125.8%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23.2% 증가한다. 반면 중산층은 6.6% 감소하고, 부유층은 19.7% 감소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지출은 어떠할까? 사회복지 지출은 많은 국가에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브라질과 몇몇 국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퇴직금 제도를 제외하면, 소득 분배에 대한 즉각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복지 지출은 건강, 교육, 사회보장(은퇴와 연금, 다양한 생활보조금, 주택보조금 등) 분야에 대한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취약계층에게

세, 인터넷 광고를 통한 소득 등을 가리킨다 - 옮긴이.

11) Nancy Birdsall, Nora Lustig y Christian Meyer, "The Strugglers: The New Poor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60, 8/2014.

12) 달러 구매력 평가(PPP)로 계산함.

지원하는 다양한 현금지원이 더해진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과 국내총생산(PIB) 내 공공 지출의 비중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특정 지출이 사회적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비용이다. 멕시코와 칠레에서 퇴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투자 시스템이다. 기여금이 의무적이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의무적일지라도 정부 비용이 아닌 개인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대로 분배 시스템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경우처럼 의무적 기여금(적어도 공식적 고용의 경우)이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볼 때, 공공지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0년간 계속 증가했다. 1992~1993년 회계 연도에 공공 지출의 50%이던 사회복지 지출이 2002~2003년 회계 연도에는 63.4%, 2010~2011년 회계 연도에는 65.9%까지 늘어났다.¹³⁾ 이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전반적으로, 특히 진보정권이 집권한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도 증가했다. 1992~1993년 회계 연도에는 국내총생산의 12.5%를 차지하던 사회복지 지출이 2002~2003년 회계 연도에는 15.6%, 2010~2011년 회계 연도에는 19.2%까지 상승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는 국가마다 다르다. 노라 루스티그, 카롤라 페시노, 존 스콧의 공동연구에 따르면,¹⁴⁾ 2009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아르헨티나 20.6%, 볼리비아 14.7%, 브라질 16.2%, 멕시

13) Pierre Salama, *Les économies émergentes latino-américaines, entre cigales et fourmis, op.cit.*

14) Nora Lustig, Carola Pessino y John Scott, "The Impact of Taxes and Social Spending on Inequality and Poverty in Argentina, Bolivia, Brazil, Mexico, Peru and Uruguay: An Overview", Working Paper No. 1316, Tulane University, 2013.

코 10%를 기록했다. 현금지원, 건강, 교육, 연금(의무적 기여와 관련된) 중 사용처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을 분석해보면, 국가별로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 2009년에 라틴아메리카 전체적으로는 교육 분야 지출이 평균 국내총생산의 6.7%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볼리비아 8.3%, 브라질 5.3%, 멕시코 4.5%(2000년)를 기록했다. 건강 분야 지출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평균 6.2%, 볼리비아 3.6%, 브라질 5.2%, 멕시코 3.1%(2000년)이었다. 연금의 경우, 전체 평균 7.2%, 볼리비아 3.5%, 브라질 9.1%, 멕시코 2.6%(2000년)이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격차는 퇴직금 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조건부 현금지급¹⁵⁾ 프로그램은 대부분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나 멕시코의 오포르투니다드(Oportunidad)처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적이며, 국가별 차이도 상당하다. 조건부 현금지급의 비율은 아르헨티나가 국내총생산의 0.8%, 볼리비아 0.7%, 브라질 0.7%, 멕시코는 0.8%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이다. 즉각적인 이유는 조건부 현금지급이 소득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몇몇 국가에서는 최저연금이 최저임금의 변화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그 영향이 더 컸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지원 정책은 국내총생산 대비 지원금 비중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빈곤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불평등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브라질의 빈곤율이 41% 하락한 이유이다), 완전고용의 증가, 비공식 고용의 감소이다. 공공 보건과 교육의 향상을 통해 계층이동의 토대가 형성된다면, 사회복지 지출은 결국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미래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15)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을 시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결국,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기능이다. 브라질 같은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임금인상은 정치적 산물이다. 역설적이게도 국제 분업과 고급인력 위주의 인력 공급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 국가에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은 가위가 움직이듯 교차한다. 일자리 공급에서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고급인력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수요는 두 가지 이유로 줄어들고 있다. 첫째,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낮은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의 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첨단기술 산업의 고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별로 복잡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첨단기술 산업의 기업과는 반대로 비숙련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서비스 분야와 상업 분야는 자연스럽게 국제 경쟁에서 보호되므로,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숙련노동자를 고용한다. 이러한 노동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가위 효과는 계층 하락을 야기한다. 고급인력은 자신의 전공에 맞지 않는 직업에서 학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물론 그보다 낮은 학력의 노동자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집단 사이의 소득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II.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소득 불평등 감소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전적으로 설문조사 방법만 사용한 소득 불평등 통계를 재검토하려는 연구가 한창이다. 이 중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이야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전에는 이용할 수 없

었다) 세금신고 자료 덕분에 소득 불평등 감소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최상위 10% 소득 계층의 세금신고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나머지 90% 소득 계층의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평가를 결합하고 있다.¹⁶⁾

소득 불평등은 예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설문조사 방식에서는 국가 전체 소득 중 최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간의 발표와는 달리 그 비율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더 늘어났다. 브라질의 경우, 가장 부유한 계층(상위소득 0.1%, 1%, 5%)이 차지하는 비중은 브라질 가계표본조사(PNAD: Pesquisa Nacional por Amostra de Domicílios)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다. 하지만 상위계층 내부의 소득 격차는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하다. 마르셀루 메데이루스, 페드루 소자, 파비우 아빌라 지 카스트루의 공동연구에 따르면,¹⁷⁾ 세금신고 자료를 분석할 경우 2006~2012년 최상위 0.1%의 평균소득은 1% 평균소득의 43.2배를 상회하는데 반해, 가계표본조사를 통한 수치는 24.2배였다. 상위 0.1%와 5% 사이의 평균소득 비율 역시 세금신고 자료에 의하면 24.6배이지만 가계표본조사에 의하면 10.1배밖에 되지 않았다. 상위 1%와 5%의 소득 비율 역시 각각 56.7배, 41.6배로 차이가 난다. 설문조사에서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과소평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 소득의 상당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소평가의 정도도 심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별 소득분포에서는 오로지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소득 같은 것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상위층의 소득은 기업의 소득인 경우가 많아서, 기업 이윤으로 정산되어 소득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16) José Roberto Afonso, *op. cit.*; Marcelo Medeiros, Pedro Souza y Fabio Avila de Castro, “O topo da distribuição de renda no Brasil: primeiras estimativas com dados tributários e comparação com pesquisas domiciliares, 2006-2012”, mimeo, 2014(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479685).

17) Marcelo Medeiros, Pedro Souza y Fabio Avila de Castro, *op. cit.*

결과를 낳는다.¹⁸⁾ 이런 방식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지도 않고 또 설문조사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 지수가 과소평가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특히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평등의 감소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하위 30~40%의 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결과가 상대적 빈곤의 현저한 감소로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의 감소라기보다 로렌츠 곡선의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위 30% 빈곤층은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고, 전체 소득 대비 빈곤층의 소득 비율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빈곤계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계층에게도 마찬가지다.

극빈층의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선진국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부유층의 경우는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있다. 진보 정권이 이끄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미래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 되리라는 희망이 열렸지만,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경제 구조를 원자재 중심으로 재편한 국가는 현재 원자재 위기에 무방비 상태이며, 다른 국가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¹⁹⁾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고, 불평등과 빈곤이 악화할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진보 정권을 포함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원자재 수출의 호황에 힘입은 재정적 안정을 과신한 나머지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최이슬기 옮김

18) José Roberto Afonso, *op. cit.*

19) Pierre Salama, *Des pays toujours émergent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2014.